

#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 일본 일계인(日系人) 귀환 이주와 비교를 중심으로

김 조 훈 (하이웃 이주민센터)  
(boy1601@hanmail.net)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일계인과 한국의 고려인의 귀환 이주를 비교분석하여 고려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귀환 이주 과정과 정착 경험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 사회는 일계인을 외국인 노동자로 인식했지만, 한국 사회는 고려인을 독립운동했던 동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일본의 재외동포정책은 동화주의에서 다문화 공생주의로 변화하는 반면, 한국은 점차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두 집단은 단순노무직 종사와 집거지 형성으로 인해 자녀 교육 문제를 공통으로 겪었으나, 경제위기 경험과 기업가계층의 존재 여부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려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 정책을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려인 자녀들이 다중 언어 능력과 정체성을 균형 있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주제어 : 고려인 귀환 이주, 일계인 귀환 이주, 사회통합, 다문화주의, 재외동포정책

# I. 서론

세계화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주민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국으로 외국국적동포<sup>1)</sup>들이 귀환 이주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864,363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641,273명 가운데 32.7%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4). 이렇게 국내에 이주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려인<sup>2)</sup> 동포들의 국내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통계 자료상 공식적으로 CIS<sup>3)</sup>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국내 거주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고려인은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83,825명 가운데 1,013명(1.2%) 정도였지만, 2024년 11월에는 고려인의 수가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864,363명 가운데 112,192명(12.9%)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후 1993년 국내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산업연수생 제도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때는 체류가 보장되는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 오거나 관광비자로 단기간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실제 그 수도 많지 않았다(바딤 아쿨렌코 2024, 24-25).

- 1)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자를 의미하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민족의 일원으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재외동포청. 출처: <https://oka.go.kr/>, 검색일: 2025. 1. 12.).
- 2) 2013년 3월에 제정된 고려인동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고려인 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바딤 아쿨렌코(2024)는 고려인마을을 분석하면서 국내로 귀환 이주한 고려인을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사할린 동포이고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 동포이다.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는 1992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별귀환프로그램으로 재이주하였으며 대부분이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한국어가 유창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를 시작했다가 2008년 재외동포비자가 허용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귀환 이주했다(바딤 아쿨렌코 2024, 24-25). 여기서 본 연구자가 말하고 있는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다.
- 3) CIS는 독립국가연합을 뜻하는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약자로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국가들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로, 2022년 현재 9개의 정회원국과 1개의 준회원국이 있다. 정회원국으로는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고, 준회원국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허성태·임영언 2014).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들의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sup>4)</sup>

이렇듯 고려인 동포가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연쇄 이주는 고려인들을 위한 상업적 인프라가 형성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고려인 집거지가 형성되었다(장안리·박미화 2022, 67).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해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 동포가 늘어나면서 집거지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임영상(2023, 15)은 2021년 6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고려인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쓴 그의 책에서 2023년 현재 전국에 500명 이상의 고려인이 모여 사는 집거지가 최소한 28개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sup>5)</sup>

이렇듯 고려인 동포가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연쇄 이주는 고려인들을 위한 상업적 인프라가 형성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고려인 집거지가 형성되었다(장안리·박미화 2022, 67).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해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 동포가 늘어나면서 집거지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sup>6)</sup> 하지만 고려인 동포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현상은 아직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선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분명

---

4)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수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CIS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가 신설되면서부터였다고 보는 견해가 다소 우세하다(곽동근·임영상 2017; 박신규·이채문 2021; 유민이·최서리·김도원·박민정 2022). 이에 대해 다른 이견들도 존재하는데, 오정은 외(2014)는 당시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유입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들을 한국과 관련된 직종에 대한 취업 의지, NGO 등 민간 단체와 한국 정부의 한국어·한국문화의 부활 노력이라고 보기도 했고, 강희영(2012)은 한국교회의 선교활동, 한국기업의 진출, 한국의 대중문화 유입, 한국인과의 만남이 고려인들에게 동포로서의 기대 감정을 갖게 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5)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에는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동포들이 제조업을 비롯한 단순 노무 분야에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제(H-2)가 도입되었고, 2008년부터 구소련 국가 출신 고려인들에게 재외동포비자(F-4)가 허용되었다. 특히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에는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의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 졸업자,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만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었고,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도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국내 공인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할 수 있다.(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검색일: 2025. 01. 10.).

6) 임영상(2023, 15)은 2021년 6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고려인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쓴 그의 책에서 2023년 현재 전국에 500명 이상의 고려인이 모여 사는 집거지가 최소한 28개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고려인 동포의 귀환 이주가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저 외국국적동포라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 사회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선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유민이 외 2022, 2). 따라서 고려인 귀환 이주의 증가로 고려인 집거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이들과 함께 공존하며 사회통합을 이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의 사회통합을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선례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의 핵심이 되는 이론적 개념인 귀환 이주와 한국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에 지금까지 고려인 동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비슷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귀환 이주를 한 일계인(1세대)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주된 비교분석 내용은 일본 사회에서 일계인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원인분석, 일본 정부의 일계인에 관한 재외동포정책과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차이, 그리고 모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면서 일본 사회가 추구하게 된 사회통합의 방향이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과의 사회통합 방향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 2-1. 이론적 배경 - 귀환 이주와 한국에서의 사회통합

고려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학자마다 약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sup>8)</sup>라 하기도 하고(김영술·홍인화 2013; 임영상·정막래 2016), 어떤 이들은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라고 보기도 한다(홍숙영 2017; 광동근 외 2017). 그리고 이런 귀환 이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재이주(Re-emigration)(김재기 2014), 송환(Repatriation)(김 계르만

7) 정호윤(2022, 140)은 일계인(日系人, Nikkeijin)이란 국외로 이주한 일본인과 그 후손을 일컫는 일본인 디아스포라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2022년 기준 약 400만 명의 일계인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으며 그 가운데 브라질에는 약 190~200만 명으로 전 세계 일계인의 50% 정도가 브라질계 일계인으로 보고 있다.

8) 이주용어사전 상 정의로 볼 때 국제이주는 다른 국가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출신국 혹은 상주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IOM 2011, 32).

2017), 디아스포라 귀환이주(Diasporic return migration)(Tsuda 2003)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이는 귀환 이주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실제 귀환 이주라는 말도 큰 맥락에서는 다양한 국제이주 현상 가운데 하나로 특히 모국에 다시 정착하려는 동기를 갖고 고국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라 할 수 있기에(박신규 외 2021, 52), 재외동포들의 본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귀환 이주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정호윤 2023, 143).

또한 이러한 귀환 이주의 배경을 갖고 있는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을 이야기할 때 사회통합의 개념은 실제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그 의미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sup>9)</sup> 하지만 사회통합의 개념이 공동체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형성하고 빈부 간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고한다(김태환 2013, 138)는 측면에서 볼 때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사회통합의 형태<sup>10)</sup>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사회도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한국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의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김태환(2014)은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은 이중성(Duality)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같은 이민자라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민자의 체류 성격에 따라 사회통합 정책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인데,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잠시 있다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의 방향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반면에, 여성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아갈 것이라 여기고 일방적인 한국화의 과정을 통해 동화(assimilation)하려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의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다(김태환 2014, 80). 이에 황정미(2021)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독특한 한국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형태를 “차등배제모델(differential exclusion model)”로 규정하기도 했다(황정미 2021, 82).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의 방향 속에서 고려인 동포와 사회통합은

9) 이해경 외(2016, 194)는 한국에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고 할 때,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 결합(Social incorporation), 사회 편입(Social integration), 사회 결속(Social cohesion)이라는 정책 용어를 대상과 범주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통합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하여 그 의미가 모호해진 상태라고 보았다.

10) 사회통합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카슬·밀러(Castles & Miller 2021, 416)는 이민자가 일방적인 적응 과정을 통해 사회에 편입되는 동화(Assimilation), 이주자와 수용 사회가 서로 상호조정(mutual accommodation)하며 적응해 나가는 통합(integration), 이민자를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구분하고 해당 사회의 일원이나 주체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 이민자들이 수용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순응하면서도 그들 고유의 문화, 종교 및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있다고 했다.

아직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방향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있으며, 그 결과로 고려인을 위한 체류비자는 아직까지 구분배제의 형태를 띠는 방문취업비자(H-2)와 동화의 형태를 띠는 재외동포(F-4)비자로 이원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2-2. 선행연구분석과 연구 방향

실제로 국내로 귀환 이주한 고려인에 관한 연구는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사업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했으나(양승조 2019, 367), 이들과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2014년 이후로 진행된 주된 연구 분야는 국내 거주 고려인의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러한 실태와 정착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 단위 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임채완 외 2014; 오정은 외 2015), 서울(김병혁 2018), 경기도(최영미 2019), 인천(양수진 외 2020), 경북 경주(박신규 외 2021)와 같은 지자체 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최근 2024년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이 시행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 또한 대부분이 장기체류함에 따라 나타나는 고려인 집거지에 대한 연구(바담 아쿨렌코 2024; 한 발레리 2024)와, 자녀교육문제(손은숙 2024; 오예카테리나 2024)와 청년취업문제(지막심 2024)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들(김춘수·이윤주 2024; 김조훈 2024)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고려인의 상황과 지원방안에 집중됐지만 집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의 상황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는 선주민들과 고려인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이는 한국 사회에서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라는 고려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이주배경과 이에 대한 선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찬(2019)도 한국의 국제이주 연구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시작되어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봤으며(김용찬 2019, 31), 특히 귀환 이주에 관한 연구는 서구권에 비해 보다 다양한 귀환 이주의 경험이 없기에 아직도 이들의 이주 동기 분석, 적응 과정,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박신규 2019).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로 귀환 이주한 고려인들과 사회통합의 방향을 고찰하기

---

11) 유민이 외(2022, xxiv)는 동포 밀집 지역에 관해 연구를 할 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내국인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위해 비슷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귀환 이주한 일계인의 선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일본 사회에서 일계인의 귀환 이주는 고려인에 비해 15년 정도 앞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연구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한종완·임영언 2014, 435) 일계인과 조선족의 귀환 요인을 비교분석하거나(임영언 외 2014), 한국의 재외동포정책과 일본의 재외동포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정도만 있을 뿐(전영순 2022) 아직 국내의 고려인과 일계인의 귀환 이주에 대해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계인과 고려인과의 귀환 이주를 비교 연구하면서 사회통합의 방향을 논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 연구 가치는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모국에서 일계인에 대한 인식과 고려인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이유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그 실패의 과정을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비교분석해 보면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로 일계인이 적응하는 과정을 한국 사회로 고려인이 적응하는 과정을 비교분석하면서 사회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고려인 동포와 일계인의 비교분석

#### 3-1. 모국에서 인식 차이와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의 고려인과 일본의 일계인은 귀환 이주를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 한국의 고려인과 일본의 일계인에 대한 모국에서의 인식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일계인과 고려인의 법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고려인이나 일계인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라는 점에서 똑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려인에 대해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 2조(정의)<sup>12)</sup>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일계인은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고,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수 통계를 위해 외무성(外務省)에서 규정하는 조사 대상으로서의 정의만이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존재할 뿐이다.<sup>13)</sup>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모국의 정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계인을 외무성에서 혈통으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일계인에 대한 동포 의식은 많이 희박해져 있는 상황이다.<sup>14)</sup> 하지만 한국에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은 같은 혈통으로써 한민족·한 혈통이라는 인식과 함께 고려인에 대해서는 “항일독립운동가”로써 동포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sup>15)</sup>

그리고 이러한 고려인과 일계인에 대한 모국에서의 인식 차이가 생겨난 것은 그들의 형성 배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일계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본의 농촌 경제불황, 부족한 자원과 인구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악이민<sup>16)</sup>이라는 형태로 이주가 이뤄지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부분 돈벌이를 목적으로 북미나 하와이로 이주하는 형태를 띠다가 1924년 미국에서 배일이민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으로의 이주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남미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정호운 2023, 146),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남미의 브라질은 세계 2차대전의 전황과 패전의 상황 속에서도 그 영향이 미비한 지역이라 많은 일계인이 이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의 브라질계 일계인이 형성되었다(임영언 외 2011, 274~80). 따라서 일계인의 형성 배경을 보면 경제적인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비자발적인 성격보다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이주함으로써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려인의 경우에, 처음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나<sup>17)</sup> 조선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1910년 일본에

13) 세키네 히데유키(2021, 318)는 외무성이 일계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중에서 체류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의 본거지를 일본에서 해외로 옮긴 ‘영주자’ ㉡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중 해외에서의 생활은 일시적인 것으로,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기체류자’ ㉢ 일본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일계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포함된다.

14) 세키네 히데유키(2021, 314)는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일계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1960년대까지는 일계인을 동포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일계인에 대해서 인종으로는 일본인이지만 다른 나라 국민으로 인식하며 동포 의식이 많이 희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동포법)에서 “고려인 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6) 관악이민은 일본과 하와이 정부 간 체결된 이민 협약으로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약 10년간 일본인 노동자 2만 9천 명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3년간 노동을 조건으로 이주한 것을 말한다(임영언·김재기 2011, 276).



의해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조국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의 이주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김영술 2020, 44). 그러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면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이광규 1998, 72) 그들의 형성 배경에는 일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비자발적인 이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서 동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일제인과 고려인의 형성과 모국에서의 인식 차이 비교**

		고려인	일제인
형성 배경	주 거주지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브라질
	주된 요인	정치적인 요인(독립운동)(비자발적)	경제적인 요인(자발적)
모국에서 인식 차이	법적 근거	있음 (재외동포법 2조)	없음 (외무성 일제인 규정)
	모국에서 인식	같은 혈통 + 독립운동	같은 혈통 + 외국인 근로자

\* 출처: 위의 비교 내용은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로 인해 일본에서 일제인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저 남미 브라질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인식이 오히려 더 강해지게 되었고(임영언 외 2011, 81),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일본 사회(정호윤 2023, 148)에서는 일제인들이 서서히 일상생활에서나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었다(한종완 외 2014, 444).

반면에 한국에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은 독립운동가로서 동포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라는 이중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어 최근까지 고려인을 위한 비자가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만든 특별고용허가제의 성격을 가진 방문취업비자(H-2)와 동포로 바라보는 재외동포비자(F-4)로 분절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이는 한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허가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한국 사회로 유입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나 주체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17) 김영술(2020, 39)은 고려인의 연해주 이주 원년은 연해주 주지사 카자케비치(П.В. Казакевич)에 의해 이주 정착에 대한 협조 명령이 내려진 1864년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이전에도 연해주에 한인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미 와서 정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귀환 이주한 고려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을 외국인 근로자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회에서 일제인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지금도 그들만의 집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배제를 경험하는 것은 일본 사회가 그들을 브라질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는 보는 데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이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고국을 위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그들의 이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동포이자 한민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2.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비교분석

그리고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비교해 보면, 먼저 두 정책이 한민족, 같은 혈통에 대한 문화적 배경 속에 시행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일제인과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를 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의 의도적인 측면과 그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침략자의 관점에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타민족과 주변 문화에 대해 무시하고 차별하면서 우월한 일본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민족 중심의 동화정책이 그 중심에 있었다(임영언 외 2014, 286). 이에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982년 처음 도입<sup>18)</sup>되었지만 입국 관리법으로 관리하면서 차별 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3D분야의 단순 업무에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이 일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정호윤 2023, 148). 이에 일본 정부는 단순 인력 부족의 문제와 외국인 불법체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일제인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들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이하 입관법)을 개정하여 일제인 3세대와 그 가족에게까지 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정주자(定住者)”라는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다(임영언 외 2011, 281). 이러한 일본의 포용적인 재외동포정책은 당시 1980년대 브라질의 극심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브라질계 일제인들이 일본으로 귀환 이주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sup>19)</sup>

18) 1982년 외국인 연수 기능실습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법률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저개발국과의 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로써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만 규정되어 있다(임영언 외 2014, 287).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식민 지배의 역사가 있지는 않지만, 한민족·한 혈통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유사하게 동화정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sup>20)</sup>되기 시작했지만, 이들을 관리하고 차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sup>21)</sup>되면서부터였다. 이 법의 개정으로 구소련과 중국에 살고 있던 재외동포들에게도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비자가 발급되었고 이로 인해 구소련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귀환 이주하는 현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고려인이나 일제인이 모두 다 귀환 이주를 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재외동포정책에는 정책의 의도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일본의 재외동포정책은 일제인들을 통해 일본 내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나타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증가했지만,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외동포법상 대상자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구소련과 중국지역의 재외동포에도 체류비자가 허용되면서 그 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이후에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일본의 재외동포정책의 경우 일제인들을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해서 일본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제 일제인들이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제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노동 개념과 문화에 있어서 일본과 브라질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19) 당시 일본 정부는 정주 의사가 있는 일제인들이 더 쉽게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으며(임영언 외 2014, 284) 이러한 적극 수용정책에 따라 일본으로 이주한 일제인이 2007년 말에는 31만 6,000명까지 이르게 되었다(한중완 외 2014, 435).

20) 1991년 10월에 제정된 법무부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출처: <https://www.archives.go.kr/> (검색일; 2025년 2월 6일).

21) 한국의 경우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것은 재외동포법상의 대상자로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를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진현경 2022, 126).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자 동질성을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일계인들을 일본인과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브라질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질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중국에는 일계인을 브라질에서 상대적으로 저학력, 하층민으로 살다가 귀환 이주한<sup>22)</sup> ‘일본에 일하러 온 브라질인 노동자’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임영언 외 2011, 273). 이에 일본 사회에서는 서서히 일계인들이 이질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로 바라보며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차별배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본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계인에 대한 차별배제의식은 더욱 강화되었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채 임시 계약의 형태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일계인들이 가장 먼저 실직자가 되었고, 대부분 생활보호수급자<sup>23)</sup>(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인들도 생활이 어려워 지게 되자 그 불만이 배외주의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sup>24)</sup> 결국 일본 정부는 포용적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재외동포정책을 포기하고, 2009년 “일계인 실업자에 대한 귀국 지원사업”<sup>25)</sup>을 통해 오히려 일계인들의 귀국을 중용하는 재외동포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계인 수용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질성을 갖고 있는 일계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2) 임영언 외(2014, 295)는 일본 나고야에서 기술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계인에 관한 생각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일본인들이 일계인을 “브라질에서 하층민과 저학력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본어도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3) 일본에서는 1954년 후생성 사회국장 통지로 “정당한 이유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도 생활보호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재일동포나 일본인 배우자 등과 같이 정주자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생활보호비 지급을 인정하는 행정적 근거가 있다(사토 아키히토 2013, 619).

24) 대표적인 일본의 배외주의운동으로는 2007년 인터넷에 설립된 우익단체로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이 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이 누리는 재일특권(在日特權)을 없애는 것인데, 여기에는 일계인이 누리고 있는 특별영주권 제도, 기초생활수급지원제도 포함되어 있다(사토 아키히토 2013, 615).

25)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 일계인의 대량실업으로 인해 2009년 4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브라질로 귀국을 희망하는 일계인들에게 1인당 30만 엔, 부양가족 1인당 20만 엔을 지급하였는데, 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신 ‘당분간 같은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었다(임영언 2014, 158).

〈표 2〉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법적 지위

구분	F-4 비자 (재외동포)	H-2 비자 (방문취업)
체류 기간	- 최초 체류 기간 최장 5년. - 유효 기간 없고 3년 단위로 갱신 때 장기체류 가능. -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는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최초 체류 기간은 3년 범위 내. - 취업 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으면 입국 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체류 가능 -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
취업 활동	-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함. - 단순 노무 분야는 일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단순 노무 분야 38개 업종만 허용됨. (작물 재배업, 축산업, 일반음식점업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코리아

반면에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 사회로 고려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수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한국의 이민정책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그대로 재외동포정책에 반영이 되어 고려인의 체류비자가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분절화되어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2〉에서 보듯이, 이 두 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해 만든 비자이기에 대부분 고려인이 귀환 이주할 때 받았던 비자이기는 하지만 두 비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비자의 차이는 한국의 이민정책이 재외동포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결국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인력수급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재외동포로써 한민족, 동일 혈통을 가진 동포로 바라보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를 보면, 먼저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비자(H-2)는 특별고용허가제로써 처음부터 국내 단순 노무 업무의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에게 입국이 허용된 비자인데, 이는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숙련 외국인노동자(E-9)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분명 고려인을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인력수급의 대상으로 바라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비자(F-4)<sup>26)</sup>의 경우에는 외국인임에도 체류 기간을 1회 3년, 체류 기간 연장도 한도가 없는 특권을 부여하고 취업제한 직종 외에는 거의 한국인과 같은 특권을 누릴

26) 재외동포비자(F-4)는 60세 이상의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0세 미만의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법무부 고시 국가로 지정된 21개국에 거주하는 동포의 경우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같은 특별조건을 충족해야만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영순 2022.144).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고려인들을 한민족, 같은 혈통이라 보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다(전영순 2022, 143).

〈표 3〉 외국인 인력 정책으로서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비교

구분	일반 고용허가제	특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개념	고용허가제는 송출국의 노동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한국 노동부 간에 국가 간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국내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인력수급 제도	방문취업제는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국내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7년 3월에 도입된 인력수급 제도
대상	국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재외동포
체류	-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 사업주 요청 시 재고용 가능	-3년: 중국·러시아·몽골 등 동포에게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 사업주 요청 시 재고용 가능
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인원	업종별 쿼터를 두고 관리함.	사증 발급총량제(30만3천명)로 관리함.

\* 출처: 진현경(2022, 135)에서 인용한 이형노(2019, 1656) 참조, 보완

이렇듯 이중성을 가진 한국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한국으로 귀환 이주하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시선도 이중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패를 경험한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과는 달리 아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단계에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시선을 인식하고 법무부에서는 2025년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를 재외동포비자로 통합하고자 新 이민·출입국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4, 10). 또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도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비롯한 재외동포에도 관심을 갖고 지자체 단위로 공모사업을 통해 이들의 체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재외동포청 2024)은 분명 한국 정부가 국내에 귀환 이주한 고려인들을 포용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아직은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미화하는 의식구조와 혈연 중심의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을 이뤄가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고(법무부 보도자료 2024, 5), 사회통합의 방향도 여전히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보다는 친한국적<sup>27)</sup>이고 한국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고려인과 사회통합을 생각할 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계인 수용정책과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일계인 수용정책의 과정을 통해 정주하는 외국인에게 동화적으로 접근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등하게 공존하는 다문화 공생을 국가 주요 정책의제로 삼기 시작했다(임영언 외 2014, 287). 그리고 이를 통해 배외주의적 의미를 가진 ‘외국인’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포섭의 의미를 가진 ‘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이질성을 가진 이민자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사회 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임영언 외 2014, 288).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을 생각할 때 동화의 형태로만 나아가는 것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일본이 실패로써 경험한 일계인 수용정책을 선례로 삼아 한국 사회도 고려인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한국 사회로 동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질성을 갖더라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4〉 일본의 일계인 수용정책과 한국의 고려인 동포 정책의 비교

구분	일본의 일계인 수용정책	한국의 고려인 동포 정책
근거 법안	1989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을 개정하여 ‘정주자’ 비자 신설	2004년 3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한 방문 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신설, 2010년 고려인동포법 제정.
정책의 변화	- 입국 관리법 개정(1999) 일계인 가운데 정주를 희망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 - 다문화 공생이 주요 의제로 등장(2005) - 일계인 실업자에 대한 귀국 지원사업(2009)	재외동포법신설(1999) 재외동포법 개정(2004) 방문취업비자(H-2) 신설(2007) 재외동포비자(F-4) 신설(2008) H-2/F-4 비자 통합추진(2025)
통합의 방향	동화주의 → 다문화 공생(다문화주의)	차등배제주의(동화+구분배제) → 동화주의

\* 위의 비교 내용은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7) 법무부는 신 출입국·이민정책(2024, 7)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 과제로써 우수 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가칭 청년드림(Youth’s Dream in Korea)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주목적이 “친한과”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3-3. 귀환 이후 적응 과정에서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마지막으로 한국의 고려인과 일본의 일계인은 귀환 이주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모국에서 적응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비교해 보면 귀환 이주의 배경과 귀환 이주 초기 직업이나 생활방식 그리고 집거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적응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경험이나 기업가계층의 형성 여부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모국으로 귀환 이주한 배경을 살펴보면 비슷하게 강한 배출(Push)요인과 강한 흡입(Pull) 요인을 통해 모국으로 귀환 이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일계인이 모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입관법 개정으로 “정주자(定住者)” 비자가 만들어지면서 일본 사회의 안정적이고 고임금이 보장되는 많은 일자리는 이주 강한 흡입 요인으로 작용했고, 1980년대 시작된 브라질의 정치적·경제위기<sup>28)</sup>는 강한 배출 요인이 되어 많은 일계인이 일본으로 귀환 이주하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려인들도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의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가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한국의 일자리는 강한 흡입 요인이 되었고,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세계 경제 대공황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경제침체는 강한 배출 요인<sup>29)</sup>이 되어 많은 고려인이 모국으로 귀환 이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전신욱 2007, 84-90; 바딤 아쿨렌코 2024, 25).

두 번째로는 귀환 이주한 이후 적응 과정에서도 직업이나 생활방식에서도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귀환 이주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계인이나 고려인 모두 단순노동 제조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와 생활 문제로 집거지를 형성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계인들은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몇 년 동안만 일을 하다가 다시 브라질로 귀국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단순노동 제조업에서 데카세기(出稼ぎ: 일시적인 돈벌이)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본래는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단순노동 제조업에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일계인들에 부여한 비자는 취업제한이 없어서 일본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단순노동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

28) 브라질에서는 32대 대통령인 콜로르 대통령이 1990년에 취임하면서 선거 당시 대규모의 부정 축재를 한 혐의로 1992년 하원의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 정지가 되었고, 상원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1992년 12월에 사임하였다(정호윤 2022, 148).

29) 김 게르만(2004)의 경우에는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를 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동으로 돌아가려는 욕구와 원동지방 정부의 지원, 한국의 각종 단체의 지원, 고려인의 민족적 성향과 단체결성, 가족 중심의 고려인의 특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으로 귀환 이주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단순 노동업무의 경우 노동강도가 강하고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 3D업종이 대부분이고, 주로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고용이 이뤄지기에 1년 미만의 짧은 고용 기간으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계인들은 지속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일본기업이 밀집된 공업지대를<sup>30)</sup>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서히 정주화가 진행되면서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일계인 집거지가 형성되었다(임영언 외 2011, 282).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서 고려인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려인들도 귀환 이주 초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을 중심으로 저렴한 임대주택과 일자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바딤 아쿨렌코 2024, 30), 이는 고려인들도 일계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조업 분야의 단순노동직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인들도 일계인들처럼 이러한 직종들이 몰려있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여 살다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거지를 형성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장안리 외 2022, 71).

세 번째로는 일계인과 고려인 모두 다 집거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 모국어를 잘 못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세대 간 적응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일계인의 경우 집거지의 형성으로 생활은 좀 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잘 습득하지 못하는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게 되었다(사토 아키히토 2013, 618). 이에 특별히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질성을 가진 일계인들을 한민족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사회 내에서 일계인과 일본인들 간의 교류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임영언 외 2014, 296). 그러다 2008년 찾아온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본어 구사 능력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자(한중완 외 2014, 434), 일본어를 잘 못하고 일본인과 교류가 없었던 일계인들은 대부분 실직자가 되거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30만 명의 일계인 가운데 10만 명의 일계인들이 브라질로 다시 돌아갔지만(임영언 외 2014, 292), 그 가운데서도 20만 명의 일계인들은 일본 사회에 남기로 한 이유는

---

30) 임영상(2014, 155)은 일본에서 일계인들의 집거지로는 군마현 오이즈미마치(群馬県大泉町), 요코하마시 쓰루미구(横浜市鶴見区),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静岡県浜松市), 나고야시 오수(名古屋市大須)가 있는데 대부분 일계인은 이곳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전자제품조립, 악기 산업, 식품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봤다.

대부분 일계인 1.5~2세대의 자녀교육문제였다.<sup>31)</sup>

이에 귀국하지 않고 남은 일계인들의 경우 일본어가 잘 안되는 일계인 1세대와 일본의 학교에서 학습하고 자라 일본어가 잘 되는 일계인 1.5~2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일본 사회로 적응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계인 1세대는 일본어가 잘 안되고, 노동연령제한의 문제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거나 잦은 전업을 하면서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차별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일계인 1.5~2세대의 경우에는 동질화를 강조하는 일본 사회에서 3가지 유형으로 적응 양상을 보인다. 먼저는 일본학교에 다니면서 스스로 일본인으로 규정하며 완전 일본화를 택하는 2세대 집단이고, 반대로 브라질 교회에 다니면서 브라질 친구들과만 만나고 포르투갈어만 쓰면서 스스로 완전히 브라질인으로 여기면서 완전 브라질화를 택하는 2세대 집단도 있다. 그리고 더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스스로 100% 일본인이자 100% 브라질인이라 생각하며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2세대 집단이 있다(정호윤 2023, 156). 일본 사회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일계인들은 대부분 일본 사회로 완전한 적응을 위해 현지 학교에서의 교육을 받고 일본화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학교내에서 일계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인 태도를 경험하였을 때 대부분 브라질계 학교로 가거나<sup>32)</sup>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화나 중간자의 입장은 항상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양가운데 있다.

이러한 적응 양상은 집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과 유사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도 귀환 이주를 할 때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sup>33)</sup>을 중심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정착 때에 밀집 거주지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먼저 귀환 이주한 성인 고려인을 중심으로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집거지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고 또 다른 연쇄 이주를 촉진하기 때문에 생활은 한결 편해질 수 있다(장안리 외 2022, 68). 하지만 이러한 집거지 형성은 일계인의 집거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는 고려인 1세의 경우 집거지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31) 실제로 본국으로 귀국한 일계인들은 대부분 자녀가 없는 20~35세의 일계인들이었지만, 일본에 남아 영주를 선택한 일계인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는 40대 이상의 일계인들이었다(한종완 외 2014, 448).

32) 정호윤(2023, 155)은 일계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브라질계 학교로 보내는 이유를 2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일본에서 단기 체류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브라질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가 일본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브라질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학급 내 집단 따돌림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33)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가족 연쇄 이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김경학(2024, 11)은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세대 간 돌봄 순환이라는 가족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국인과의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인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주야간을 바꿔가면서 일하는 단순 노동업무를 하고 있어 노동시간이 긴 편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일제인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데,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일제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차별배제의식이 높아져 갔던 것처럼 한국 내에서도 고려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을 한민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바짐 아쿨렌코 2024, 35).

고려인 1.5~2세의 경우에도 귀환 이주의 증가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특별히 집거지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의 교육법상 중등교육까지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초등생의 경우에는 거주 등록이 된 학교에 다니게 되어 있어 고려인 집거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이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sup>34)</sup> 상대적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바짐 아쿨렌코 2024, 34). 이에 따라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의 학교로 진학하기는 하나 대부분 한국어가 잘되지 않아 기초학습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학교 교육시스템은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사용만을 강조하고, 교육자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고려인 자녀들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남부현 2024, 18). 따라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상에서는 고려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육열이 강한 고려인들은 최근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학교 밖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려인의 필요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김조훈(2024)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고려인들이 러시아화를 추구하는 대안학교, 한국화를 추구하는 사설학원, 한국화와 러시아화를 함께 추구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과 같은 3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김조훈 2024, 30).

이는 그 양상이 좀 더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일제인 1.5~2세의 적응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질성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동화정책을 추구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일제인들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에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본화로 가든지 차별을 피할

---

34) 전국적으로 고려인 집거지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로는 경주 흥무초등학교, 청주 봉명초등학교, 아산 신창초등학교, 인천 문남초등학교와 함박초등학교가 있다(바짐 아쿨렌코 2024, 35). 대표적으로 경주 흥무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전교생 355명 중 238명(67%)이 고려인이고 그중 초등1~2학년의 비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다(흥무초등학교 2024, 5).

수 없다고 보고 아예 브라질화나 브라질화와 일본화를 함께 택하는 적응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도 일제인 2세들의 적응 과정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 통합정책이 동화정책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체로 고려인의 적응 양상이 일제인의 적응 양상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적응 과정에서 2가지 정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경제위기의 경험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일제인의 경우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였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었고 일제인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일본어를 못하는 일제인에 대해 차별배제하고 다시 브라질로 귀국하는 것을 종용하는 적응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인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일자리가 없어질 정도의 경제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인과 일제인들이 비슷하게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데카세기(出稼ぎ: 일시적인 돈벌이) 노동자로 머물러 그들 특유의 에스닉(ethnic) 기업을 창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임영언 외 2014, 297), 고려인의 경우에는 슈퍼, 빵집, 음식점과 같은 업종에서 에스닉 기업을 창업하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가들은 고려인협회와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재정지원을 하면서 이들 집단에서 가장 활발한 계층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바딤 아쿨렌코 2024, 34).

〈표 36〉 일제인과 고려인의 적응 과정 비교

구분	일제인의 적응 과정	고려인의 적응 과정
유사점	귀환 배경	강한 흡입요인(모국의 일자리와 비자 부여) + 강한 배출요인(거주국의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족)
	초기 적응	귀환 이주한 모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단순노무업 종사 → 집거지 형성
	1세대	장기간노동, 집거지 중심생활 선주민과 교류가 거의 없음.
	1.5~2세대	3가지 유형으로 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남. 한국화(일본화), 러시아화(브라질화), 중간자화
차이점	경제위기로 재이주 경험 있음. 기업가계층 부재	경제위기와 재이주의 경험 없음. 기업가계층 있음.

\* 위의 비교 내용은 논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였음.

#### 4.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사회로 귀환 이주한 고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사회통합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일본으로 귀환 이주한 일계인을 선례로 비교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이 연구를 위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일본의 일계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일계인의 귀환 이주 속에서 일본에서 일계인에 대한 인식, 일본의 일계인 수용정책, 그리고 일계인이 일본 사회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먼저 일본의 일계인과 한국의 고려인에 대해 귀환 이주한 모국에서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의 차이가 생긴 배경에는 먼저 이들의 형성 배경을 꼽을 수 있었는데, 일계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를 갖고 자발적으로 이주했지만, 고려인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일본에서 일계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고 같은 혈통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어 이들을 바라볼 때 외국인 근로자와 비슷하게 바라보는 인식이 있어 차별 배제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고려인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있고, 같은 혈통으로서 독립운동이라는 배경이 있어 상대적으로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재외동포정책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먼저 두 나라의 정책이 한민족, 동일 혈통에 대한 문화적 배경 속에 시행된 정책이라는 점과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일계인과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먼저 정책적인 의도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계인을 통한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이 헌법불합치로 개헌이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로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의 차이로 인해 동화정책을 고수하던 일본 정부는 이질성을 가진 일계인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공생주의로 전환했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려인을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라는 2가지 시선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재외동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동화주의 정책이 더 강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체류에 따른 일계인과 고려인의 적응 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일계인과 고려인 모두 다 귀환 이주를 하게 된 배경이 강력한 흡입요인과 배출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초기 적응 과정에서 직업도 얻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단순노무업에 종사하면서 밀집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3가지 유형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학교 교육이 동화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적응 과정에서 일계인은 일본의 경제위기로 인해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배제를 경험하고 다시 브라질로 재이주한 경험이 있었지만, 고려인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제위기로 인한 재이주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고려인의 경우에 일계인과는 달리 에스닉 기업을 창업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업가계층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귀환 이주한 고려인들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일계인과 고려인의 모국에서 인식의 차이 분석을 통해 볼 때, 한국 사회가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려인에 대한 선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상호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같은 민족이라 여겼던 일계인들이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하지 않자, 이질적인 외국인 근로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일계인과 일본인간에 상호교류하는 소통의 자리가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일계인과 일본인간 상호교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군마겐 오이즈미초(群馬県大泉町)에 있는 다문화 공생커뮤니티센터에서는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주민의 질문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상호교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임영언 2011, 287).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집거지를 이루고 살아가는 고려인들을 바라보는 선주민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 사회가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고려인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자리는 일본의 선례로 먼저는 지자체나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집거지에 거주하는 선주민들과 고려인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상호교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이질성을 다양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는 두 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을 비교분석을 한 것을 통해서 볼 때, 고려인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동화정책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일계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동화주의 정책과 더불어 동질성을 강조하는 일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일본 정부도 일제인을 수용하는 재외동포정책이 동화정책 탓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제인들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공생의 개념으로 사회통합의 방향성을 바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한국은 고려인을 한민족, 동일 혈통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고려인을 생각할 때 같은 민족이라 먼저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들을 만날 때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 이질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 사회가 고려인을 그저 같은 민족으로만 생각하고 동화주의 정책으로 이들을 포용하려고만 한다면,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다양성을 이질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직은 한국 사회가 고려인을 차별하고 배제할 정도로 이질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도 일본 사회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경험한다면 그들의 다양성을 이질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기업가계층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들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친한국적이고 한국화시키려는 동화정책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장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고려인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양성으로 존중함으로써 그들이 선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인과 일제인의 적응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나타난 자녀 교육 문제를 볼 때, 고려인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귀환한 고려인 1.5세와 2세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귀환 이주한 세대의 자녀 세대인 1.5세와 2세들의 교육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는 실제 일제인들이 경제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브라질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 사회에 남아 있었던 것은 자녀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이들과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장은 갑작스럽게 증가한 고려인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 한국어 학습과 한국어 사용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사회에서 일제인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에 일제인 1.5~2세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게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도 동화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한국화, 러시아화, 중간자화 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과 한국어 사용을 고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오히려 고려인 1.5~2세들이 가지고 있는 다중 언어능력과 다중의 문화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많은 학자는 이러한 다중 언어능력과 다중의 문화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킨다면 문화 적응에 더 유연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이는 사회통합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남부현 2024, 19). 따라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려인들과 사회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이 가진 다중적인 언어 능력과 다중적인 정체성이 더 균형 잡힌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려인과 일본의 일제인 귀환 이주를 비교하면서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일제인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했다는 연구 특성상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제인의 정책과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에 관해 연구할 때, 일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귀환 이주의 경험이 있는 나라들과 비교연구를 진행해 본다면 고려인과의 사회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는데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강희영. 2012.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의 이주 경험과 트랜스 로컬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구소련 유학 이주여성의 한국 체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광동근 · 임영상. 2017. 고려인 동포의 '귀환'과 도시재생-안산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4), 175-212.
- 권승. 2009.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19(1), 354-378.
- 김 게르만. 2004. 소련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 고려인의 이주 현황. 러시아 고려인 역사 140주년: 성찰과 새로운 인식, 재외동포재단 · 재외한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 김경학. 2024. 국내 노년기 고려인 이주자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할머니바부쉬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64, 1-40.
- 김미영. 2021.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 - 다문화 수용성과 제노포비아. 다문화콘텐츠 연구 36, 45-82.
- 김영술. 2020. 국내 거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형성과 변화연구. 재외한인 연구 51, 31-68.
- 김영술 · 홍인화. 201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1), 131-161.
- 김용찬. 2019.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과 과제, 민족연구 (74), 30-51,
- 김병혁. 2018. 이주 고려인의 서울 정착을 위한 대책. 서울연구원.  
출처: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018-CR-01-03\\_0.pdf](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2018-CR-01-03_0.pdf) (검색일: 2024.12.15.).
- 김예슬. 2020. 국내 체류 고려인 청년층의 적응양상분석.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김조훈. 2024. 경상북도 고려인 동포의 지원현황과 과제 - 경주시 H 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학회 67, 113-138.
- 김조훈. 2024.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고려인 청소년 적응과정과 과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슈브리프 12, 28-33.
- 김진희. 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127-153.
- 김춘수 · 이윤주. 2024.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의 F4R 비자와 지역정주: 경상북도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재외한인학회 67, 43-72.

- 김태환. 2013. 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환. 2014.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채.
- 남부현. 2024. 국내 고려인 정책과 차세대 지원방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슈브리프 12, 11-19.
- 노경달 · 이진. 202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24(1), 299-332.
- 니끼찌나 율리아. 2020. 한국에서의 고려인 귀환 이주와 집단 거주지 연구. 박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 바딤 아쿨렌코. 2024. 국내 고려인 공동체: 고려인 마을의 특성과 과제. 국내 고려인 집거지와 차세대교육.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포럼, 21-36.
- 박봉수. 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통과의례 내러티브 탐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 박신규. 2019. 두 재외한인의 삶을 통해 본 귀환 이주의 특징분석: 사할린 한인S와 중남미 한인 P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14, 151-173.
- 박신규 · 이채문. 2021. 귀환이주자로서 고려인의 지역사회 생활 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경주시 성건동 거주 고려인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5(2), 49-87.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24년 11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출처: <https://www.immigration.go.kr/> (검색일: 2025. 1. 10.).
- 법무부. 2024. 보도자료: 체류외국인 300만시대를 대비하는 新 출입국 · 이민정책 추진 방안, 출처: <https://www.moj.go.kr/> 보도일(2024. 9. 23.).
- 사토 아키히토. 2013. 2008년 이후의 경기 침체가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15-629.
- 세키네 히데유키. 2021. 일본 교과서 속의 일제인 -한국 재외동포 교육에 주는 함의. 도덕 윤리과교육 72, 315-348.
- 스티븐 카슬 · 마크 J. 밀러. 2021. 이주의 시대. 일조각
- 양수진 · 강수진 · 오정은 · Nikitia Yulia. 2022.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실태조사 및 지역사회정착지원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 오 예까테리나. 2021.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 경험연구: 경주 성건동 고려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 오 예까테리나. 2024.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 학교 교육의 성과와 개선 방향: 경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고려인 집거지와 차세대교육.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포럼, 71-94.

- 오정은 · 강희영 · 성동기. 2014. 한-CIS 관계 증진을 위한 CIS 출신 동포 활용 방안: 국내 체류 경험 고려인을 중심으로. IMO이민정책연구원.
- 오정은 · 김경미 · 송석원. 2015. 국내 거주 러시아 · CIS(고려인) 현황조사Ⅱ. 재외 동포재단.
- 유민이 · 최서리 · 김도원 · 박민정. 2022. 국민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민정책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 윤빅토리아. 2020. 한국에 귀환한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적응과정의 시사점: 20~4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 이주자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 육주원 · 신형진. 2021. 한국인의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구학 44(4), 1~18.
- 이광규. 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 이민정책연구원(IOM). 2011. 이주용어사전.
- 이해경 외. 2016. 이민정책론. 박영사.
- 임영상 · 정막래. 2016. 한국 속의 러시아: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2, 275-295.
- 임영상. 2023. 한국에서 고려인마을을 찾다. 북코리아.
- 임영언. 2014. 일계인(日系人) 디아스포라의 모국신화에 따른 귀환과 자기정체성 형성 고찰.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155-173.
- 임영언 · 김재기. 2011. 일계인(日系人)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브라질타운형성에 관한 연구: 군마젠 오이즈미초 일계브라질타운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61호, 267-291.
- 임영언 · 임온규. 2014.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계인의 모국귀환정책 연구. 일어일문학 63, 281-302.
- 임채완 · 선봉규 · 이소영. 2014.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 장안리 · 박미화. 2022. 고려인 가족 단위 이주자들 중심의 지원 정책 연구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5(2), 63-108.
- 재외동포청. 2024. 공고 제2024-54호: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공모(지방자치단체공모). 출처: <https://oka.go.kr/> (검색일: 2025. 1. 11.).
- 전경숙. 2021.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19, 309-368.

- 전신욱. 2007.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 현황: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1(3), 77-107.
- 전영순. 2022. 재외동포의 귀환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아. 2011. 연해주·사할린 한인의 삶과 정체성 - 연구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38, 391~421.
- 정진아. 2014. 국내 거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의 생활문화와 한국인과의 문화갈등. 통일인문학 58, 35-65.
- 정호윤. 2023. 일계인(日系人) 디아스포라의 귀환 이주와 브라질타운 형성 과정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브라질타운 사례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20(2), 139-165.
- 조경훈·정경락. 2022. 배타성이 다문화수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이주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2(1), 89-116.
- 지막심. 2024. 고려인 청년 교육과 취업문제. 국내고려인 집거지와 차세대교육.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포럼, 127-147.
- 최영미. 2019. 경기도 거주 고려인 생활 실태 및 정착 방안.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188.
- 텐옥사나. 2010. 러시아 사할린 한인의 민족정체성-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 허성태·임영언. 2014.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북코리아.
- 한 발레리. 2024. 국내 고려인 청년 정체성 문제해결. 밀집지역에 사는 것이 좋을까? 한국인과 흩어져 사는 것이 좋을까? 국내고려인 집거지와 차세대교육.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포럼, 11-19.
- 한종완·임영언. 2014. 일계인의 일본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의식과 차별유형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52, 433-454.
- 황정미. 2021.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의 평가와 미래 과제: 제3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회 8(2), 81-101.
- 홍숙영. 2017. 고려인의 귀환과 이주의 내러티브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10(2), 119-143.
- 홍무초등학교. 2024. 연구학교 운영종결보고서. 출처: <https://url.kr/j9g27x> (검색일: 2025. 1. 13.).

- Tsuda, Takeyuki. 2003.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Columbia University Press.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재외동포청 <https://oka.go.kr/>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투고일: 2025.01.15. ● 심사일: 2025.01.17. ● 게재확정일: 2025.02.11.

## | Abstract |

# **A Study on the Return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Koryoi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turn Migration of Nikkeijin in Japan**

Kim Johun (Hi Neighbor Migrant Center)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Koryoi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turn migration experiences of Nikkeijin in Japan and Koryoin in Korea.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examines existing studies on both groups, focusing on their migration processes and settlement experiences.

The analysis yielded three key findings. First, Japanese society tends to perceive Nikkeijin primarily as foreign laborers, whereas Korean society generally regards Koryoin as compatriots with a history of independence activism. Second, Japan's diaspora policy has gradually shifted from assimilationism to multicultural coexistence, while Korea's policy has increasingly reinforced an assimilationist approach. Third, both groups commonly faced challenges related to employment in low-skilled labor and the formation of ethnic enclaves, which in turn led to educational difficulties for their children. However, they differed in their experiences with economic crises and the presence of an entrepreneurial class.

Based on these findings, three ke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Koryoin are proposed. First, fostering interaction between Koryoin and native residents is essential to improving public perceptions. Second, Korea should transition from an assimilationist approach to a multicultural policy that respects diversity. Third, the Korean educ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upport the balanced development of Koryoin children's multilingual abilities and identity.

**<Key words>** Koryoin Return Migration, Nikkeijin Return Migration,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Diaspora Policy.